



미국 : 테슬라의 임금인상 결정, 노조 결성에 미칠 영향 우려

테슬라 측은 네바다 주 스파크스(Sparks)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의 일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2024년 1월 초부터 10%가량 인상했다.¹⁾²⁾ 그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달러에서 22달러로, 최고임금은 30.65달러에서 34.5달러로 늘어났으며, 시간당 26.2~30.65달러 사이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급여 역시 직급 조정을 통해 시간당 34.5달러로 조정되었다. 이 결정은 노동자에게 희소식이지만, 임금인상이 해당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단체협약 추진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 프리몬트(Fremont)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과로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노조 결성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모든 부상을 예외 없이 나에게 보고하라.”라며 안전 문제에 적극 나섰는데, 그 결과 노조 결성이 좌절된 전례가 있다.³⁾ 테슬라가 미국의 유일한 무노조 자동차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테슬라에서의 노조 결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머스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노골적으로 노조를 적이라고 규정하며 반노조 태도를 꾸준히 견지해 왔다.

- 1) RetailWire, “Tesla Is Increasing Pay for Factory Workers While UAW Tries to Unionize”, 2024.1.12.
- 2) CNBC, “Tesla to Raise Pay for Hourly Nevada Gigafactory Workers in January – Move Could Stave off Union Interest”, 2023.12.18.
- 3) The Guardian, “UAW Wants to Unionize Tesla. It Faces a Tough and High-profile Battle with Musk”, 2023.12.11.

미국 : 전미자동차노조(UAW), 세 개의 외국 자동차 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UAW는 2023년 12월 11일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혼다, 현대, 폭스바겐 등 세 개의 외국 자동차 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¹⁾ 혼다의 인디애나 주 공장, 현대의 앨라배마 주 공장, 그리고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가

입 지지 서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세 업체가 노조 결성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UAW는 최근 디트로이트 3사와의 단체교섭에서 큰 성과를 얻어낸 후 대대적인 조직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무노조 상태인 자동차 공장



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손 페인 UAW 위원장은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각 공장 노동자로부터 70% 이상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폭스바겐 테네시 공장의 경우 이미 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조 승인 카드에 서명했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30%가 넘는 인원이다.²⁾

한편 혼다 노조는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의 경우 비업무 시간에 비업무 공간에서 노조에 유리할 만한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압수 및 폐기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스바겐 역시 노조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노조에 유리할 만한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손 페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회사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기는커녕 이들이 앉아서 입 다물도록 하기 위해 법을 어겨 왔다.”라며 세 회사를 비난했다.

폭스바겐은 노조의 주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현대와 혼다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³⁾ 현대는 “언론 성명을 통해 밝힌 노조의 사건 설명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혼다 측 역시 “우리는 노동자들이 UAW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1) The New York Times, “U.A.W. Accuses Honda, Hyundai and Volkswagen of Labor Violations”, 2023.12.11.
- 2) Reuters, “UAW Files Unfair Labor Charges against Volkswagen, Honda, Hyundai”, 2023.12.12.
- 3) CNBC, “UAW Files Unfair Labor Practice Charges against Hyundai, Honda and Volkswagen”, 2023.12.11.

미국 : 마이크로소프트-CWA AI 사용 관련 노사 협의¹⁾²⁾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12월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노조와의 교섭에서 회사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을 제약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향후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

이크로소프트에서 이처럼 인공지능 관련 조항을 단체 협약에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섭에 참여한 노조는 전미통신노조(CWA)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인 제니맥스 소속의 대표 노조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회사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회사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하여금 “모든 이를 공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역량을 부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 합의 사항에는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서 더 높은 생산성, 성장성 및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인공지능 기술에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직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기타 자동화 기술이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제든지 알리고, 노조가 요청할 경우 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자사 제품 라인업 대부분에 Open AI 기술을 탑재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코딩 작업에서부터 이메일 작성, 소비자 수요 조사 등 다양한 업무에 이를 이용한다. 회사는 자사의 인공지능 상품을 “코파일럿(copilot)”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진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직업을 변화시키고 노동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CWA의 클로드 커밍스 주니어 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노조가 수년 동안 싸워온 것이 어떤 형태로든 기술에 의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기술은 변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커밍스 위원장은 노조는 변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기술 도입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고 일자리, 안전 및 혜택이 보호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1) Bloomberg, “Microsoft Agrees to Union Contract Terms Governing Its Use of AI”, 2023.12.11.
- 2) The Hollywood Reporter, “Microsoft Game Developer Union Reaches Deal On How AI Can Be Used In Workplace”, 2023.12.11.

미국 : 노동부, 독립계약자와 직원을 판단하는 최종 규칙 발표

미국 노동부는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직원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¹⁾ 이 규칙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그에 따라 2021년 이전에 채택된 규칙은 폐지될 예

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2021년의 규칙은 업무의 통제 정도와 개인의 이익 또는 손실 가능성을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노동자의 직



원 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규정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독립계약자 또는 직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업무에 투자한 자원의 재정적 지분과 성격, 노동관계의 연속성 정도, 해당 업무가 사용자의 비즈니스에 필수적인지 여부, 노동자의 기술 및 이니셔티브까지 고려된다. 특히 새 규정에서는 경제적 의존도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가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 새 규칙은 기존 조항과 달리 해석의 여지가 크며, 규정 적용이 애매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직

권으로 노동자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진보 회의소는 새 규칙이 각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²⁾ 독립계약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할 경우, 약 340만 명의 각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 310억 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기업들도 이 규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궁극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직원으로 분류되거나 사업 운영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JD Supra, “Department of Labor Issues Final Rule on Independent Contractors”, 2024.1.18.

2) Reuters, “Biden Administration Issues Rule That Could Curb ‘Gig’ Work, Contracting”, 2024.1.10.

미국 : 팀스터 노조와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남

팀스터 노조의 선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¹⁾ 포장, 트럭 운송, 제조 및 물류 등 분야에서 13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팀스터 노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청에 감사를 표했으며, 트럼프 측은 오브라이언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팀스터 대변인 카라 데니즈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트럼프와의 만남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일부 팀스터 지도자들은 이 만남에 우려를 표했다. 뉴욕 지부 808의 사

무총장 크리스 실버라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를 공화당이 아닌 남부연합(Confederate)이라고 비판했고, 조지아 주의 매장 관리자이자 팀스터 성소수자 간부회의 일원인 제스 리스터는 이 만남을 모욕이라고 칭하며, 트럼프 재임 당시 전미노동위원회를 반노조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 반노동적인 판결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비난했다. 또한 “노조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회의에 참석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 만남은 테이블에 오르지도 말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역시 트럼프의 만남 제안을 거부하

고, 그의 집권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손 페인 위원장은 “트럼프는 우리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것과 노동계급이 지지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이는 노동계와 바이든 현 행정부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노동 행보를 보여왔지만, 몇몇 노조들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²⁾ 일부 노조 대표들은 2022년 전국 단위의

철도 파업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블루칼라 기반 노조들은 조합원들이 실제로 공화당 지지 세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노동 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처에 불만을 표출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미국 우정노조의 마크 디몬드스타인 위원장은 “현 정부와 우편업계 간의 미해결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이든 재선을 조기에 지지하여 얻을 이익이 없다.”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1) The Guardian, “‘A slap in the face’: progressive anger as Teamsters union chief meets Trump”, 2024.1.18.
- 2) Politico, “Unions aren’t swinging to the right – but they’re doing their calculus”, 2024.1.15.

독일 : 교사 파업 금지, 유럽인권법상 허용 결정

최근 공무원 지위를 갖는 교사에 대한 독일의 파업금지가 유럽인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럽인권재판소(EGMR)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은 독일 교사들이 2009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학문노조(GEW)의 경고파업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교사들은 파업 참여에 따른 급여 감봉 및 벌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하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파업 금지가 독일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에 따른 원칙이므로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¹⁾

독일 정부는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전 토론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옹호하며, 고유한 공무원 체제를 갖춘 EU 회원국은 공무원 파업권 제한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하므로 2009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 대법정은 16대 1의 표결로 해당 법이 유럽인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독일법이 공무원에 대해 일반적으로 파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공무원의 이익대변권이 노동조합 가입과 적절한 보상 요구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일 교사는 공무원 신분에서 파



업권이 보장되는 비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파업 참가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벌

금 또한 100~300유로 사이로 높지 않은 점 또한 참작되었다.²⁾

- 1) Tagesschau, “Streikverbot für verbeamtete Lehrer zulässig”, 2023.12.14.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평생고용 및 적절한 급여 지급의 보호의무를 지는 대신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충성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파업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2009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을 인용해 파업 금지가 행정직 공무원 등 특정 공무원 집단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 Spiegel, “Streikverbot für verbeamtete Lehrkräfte ist rechtmäßig”, 2023.12.14.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발 예산 공백, 2024년 경기침체 우려로 이어져

최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의 국가부채한도 조항을 우회하는 예산 전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며 연방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 위헌결정의 대상은 2021년 신호등연정 출범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중 600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전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것이다.¹⁾ 이로써 독일 정부의 2024년 예산에도 커다란 공백이 생기며 예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정의 좌초가 우려되었으나, 연정은 수일간의 협상 끝에 2024년 예산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합의안의 핵심은 2024년에 계획했던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것이며, 기후전환기금의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등에 대

한 이산화탄소 배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²⁾

독일 정부의 2024년 예산안 조정은 2024년 독일과 유럽의 경제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2024년 독일 GDP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OECD 또한 유럽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의 투자 감축이 필연적으로 EU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³⁾ 이번 예산 갈등은 2009년 독일 기본법에 도입된 국가부채한도조항(Schuldenbremse)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는데, 특히 현재 독일이 직면한 고령화, 디지털화, 기후친화적 경제로의 전환 등의 과제는 대규모 공공투자 없이 해결이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⁴⁾

1) 독일 기본법 제115조는 정부의 연간 부채조달한도를 GDP의 0.35%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는 연방의회의 표결을 거쳐 부채한도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600억 유로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부채한도 초과가 승인되어 조달된 예산이

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예산이 원래 목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기후보호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집행되는 것에 대해 기본법의 부채한도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2) Bundesregierung, “Die Regierung hält an ihren Zielen fest”, 2023.12.13.
- 3) Tagesschau, “IW-Ökonomen erwarten weiteres Rezessionsjahr”, 2023.12.13.
- 4) Spiegel, “Wackelt die Schuldenbremse?”, 2023.11.26.

독일 : 2024년도 연방예산안 확정,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대규모 농민 시위

2024년 1월 18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2024년도 연방예산안을 승인하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예산 논쟁을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 11월 중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기존 예산안이 무산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예산 삭감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은 2월 초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¹⁾

이번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농업분야의 보조금 삭감이다. 연방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농업용 경유에 대한 지원금을 폐지하고 농업용 차량에 자동차세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²⁾ 농민들은 이에 반발해 1월 초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여 교통을 마비시켰다. 연방정부는 농민들의 저항을 고려해 농업용 경유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기로 한 기존 안 대신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농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연방정부에 보조금 삭감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³⁾

크리스티안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은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앞으로 농민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들을 돕겠다고 밝혔다. 쟈임 외스테미르 연방식품농업부 장관은 육류, 유제품 및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 세금을 도입해 마련한 재원으로 동물복지 및 친환경 농업에 기여하는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⁴⁾ 메르켈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는 이른바 고기세(Fleisch-Abgabe) 또는 동물복지세(Tierwohl-Abgabe)는 현재 정당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⁵⁾

- 1) Tagesschau, “Der Bundeshaushalt für 2024 steht”, 2024.1.18.
- 2) 현행 제도상 농업인은 농업용 경유에 리터당 21.48센트의 지원금을 받으며 농업용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 3) 결국 독일농민연합(Deutscher Bauernverband)은 예산안 확정을 앞둔 1월 15일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서 연방화물운송연합(BGL)과 함께 5천 대 이상의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는 야당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극우세력의 결집과 확장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 4) Süddeutsche Zeitung, “Landwirte können auf Entlastung hoffen”, 2024.1.14.
- 5) Tagesschau, “Traktoren, Status und Dialog”, 2024.1.15.

영국 : 취업비자 대폭 변경, 노동력 부족 우려 제기

영국 내무부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장관은 2023년 12월 4일 향후 비자 규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변경사항들은 영국 행 이민을 줄이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비자로 파트너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을 데려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기술 노동자 비자에 해당되는 기본 최저 급여는 2만 6,200파운드에서 3만 8,700파운드로 인상된다(보건의료 종사자 비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셋째, 노동력이 부족한 직업 및 직무 목록을 대폭 수정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크게 줄였다. 넷째, 파트너/결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임금 조건을 1만 8,600파운드에서 3만 8,700파운드로 인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관련 비자(graduate route visa)를 검토할 예정이다.¹⁾ 외국인 노동자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PBS, Point Based System)에 따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기업

은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를 지원해 준다.²⁾ 해당 비자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영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영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경제총(CBI)은 이 계획이 영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왕립간호대학(Royal College of Nursing)은 해당 변화가 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³⁾

하지만 보수당 소속 로버트 젠릭(Robert Jenrick) 하원의원은 노동력 부족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당 비자 규정 변경을 통해 영국 내 노동자들의 채용을 촉진시켜 영국 기업이 국내 인력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자 변경 규정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추가 대응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House of Commons Library, “Changes to Legal Migration Rules for Family and Work Visas in 2024”, 2023.12.12.

- 2) PBS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BBC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BBC, “How Are the Visa Rules Changing and How Many People Come to the UK?”, 2023.12.15.
- 3) BBC, “Robert Jenrick Insists UK Workers Will Fill Labour Gaps After Migration Crackdown”, 2023.12.5.

영국 : 북아일랜드 지역,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한 혼란 예상

2023년 12월 1일 이후 북아일랜드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임금동결 문제로 48시간 파업에 다시 돌입했다. 노조는 10%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러한 임금동결은 실질적인 임금감소라고 지적했다.¹⁾ 이로 인해 버스, 기차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공기업 Translink는 해당 파업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파업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 가장 바쁜 주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소매업, 관광업, 호텔업계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이번 파

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북아일랜드 지역 교육청도 파업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을 예측하였다. 약 5만 7,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Unite, GMB 및 Siptu는 해당 파업이 불가피했음을 밝히며 구체적인 임금인상 협상안을 요구하였다. 또한 12월 22일에 추가 파업을 예고하였고 파업은 진행되었다.²⁾ 이에 따라 12월 22일, Translink에서 관리하는 모든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 없이 끝났으며 노조는 2024년 초에 다시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³⁾

- 1) UNITE, “Public Transport Workers at Translink to Commence 48-hour Strike Action in Absence of Pay Offer”, 2023.12.14.
- 2) BBC, “Translink: Widespread Disruption Caused by Transport Strike”, 2023.12.15.
- 3) Translink, “Industrial Action”, 2023.12.22; BBC, “Translink: Strike Causes Major Transport Disruption Across NI”, 2023.12.22.



영국 : 런던 RMT 노조 대규모 지하철 파업 취소, 임금 협상 돌입

런던과 런던 교외 지역의 지하철 및 기차를 관리하는 교통 당국인 런던교통공사(TfL)는 2024년 1월 7일 저녁부터 12일 아침까지 예정된 지하철 파업으로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국 전국철도해양운수노동조합(RMT)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같은 기간 동안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런던과 교외 지역의 모든 지하철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¹⁾

지난해 11월, TfL은 RMT 및 기관차엔지니어 및 소방관협회(ASLEF)²⁾와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며, 5%의 임금인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RMT는 제안된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다며 더 높은 인상

을 요구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³⁾

그러나 1월 8일, RMT는 극적으로 파업 취소를 발표했다. TfL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 가능한 인상률은 5%이고 그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파업으로 인한 런던 내 혼란을 우려해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RMT와 TfL 간의 임금 협상이 재개되었다. RMT는 협상 재개에 동의했으며, 런던 시의 개입으로 임금인상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RMT는 TfL과의 건설적인 임금 협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디크 칸 시장은 노조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추가 임금 협상의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다.⁴⁾

1) Transport for London, "TfL Advises Tube Customers to Only Travel if Their Journey Is Essential During Planned RMT Strike", 2024.1.3.

2) ASLEF는 영국 내 지하철 및 철도 기관사를 대표하는 노조이다.

3) The Guardian, "London Underground Tube Strike Called Off after 'Positive' Talks with TfL", 2024.1.7.

4) BBC, "London Tube Strikes Called Off as More Pay Talks Planned", 2024.1.8.

프랑스 : 정부, 고령 실업자 대상 장기 실업보험 수급 기준연령 상향 필요성 제기

올리비에 뒤쇼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023년 12월 10일 르몽드와 프랑스안테르, 프랑스 텔레비전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령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장기 실업보험 기준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7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¹⁾ 이에 대한 이유로 은퇴연금 개혁으로 인해 법정 은퇴 개시 연령이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과 함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실업보험에 따르면 52세까지는 최대 실업 보험 지급 기간이 18개월이다. 반면 53세에서 54세 실업자는 최대 22.5개월 동안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부터는 그 기간이 27개월까지 늘어난다.

앞서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은 현행 실업

보험이 55세 이상 노동자들을 조기 은퇴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기존 최대 27개월인 실업보험 수급 기간을 일반 기준인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뒤술프 장관은 “문제는 ‘실업보험’ 지급 기간이 아니라 고령자들을 취업 시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1) Le Monde, “Chômage des seniors : Olivier Dussopt souhaite relever de deux ans l’âge d’accès à une indemnisation plus longue”, 2023.12.10.

프랑스 : 만성질환 환자 6명 중 1명, 노동환경에서 차별 호소

헌법 독립기구 프랑스인권센터(Défenseurs des droits)가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해 2023년 12월 14일 발표한 “제16차 고용 차별 지표 (16e baromètre sur les discriminations dans l’emploi)”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만성질환을 겪는 노동자 6명 중 1명이 장애와 건강 상태로 인해 노동환경에서 차별 또는 괴롭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¹⁾ 해당 조사는 16세에서 64세 인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 중 표본 1,000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 중 2,000명을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만성질환 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직업활동 전반과 구직 활동에 있어서 최소 한 번 이상의 차별 또는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교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어 절

반 이상(55%)은 정신적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른 집단에서 같은 문제를 호소한 35%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질환을 겪는 노동자 중 40%는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밝혔지만 어느 쪽에서도 지지와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를 잃거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재분배되는 등의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9%는 본인의 직무능력에 적합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로 실제 지원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프랑스 국립 노동조건개선기관(ANACT)에 따르면 2019년 만성질환을 가진 경제활동인구는 15%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2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동환경에서 처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 Défenseur des droits(2023), “Concilier maladies chroniques et travail : un enjeu d’égalité”, <https://www.defenseurdesdroits.fr/> (2023.12.17).

프랑스 : 유럽의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합의 도출¹⁾

2023년 12월 13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지위 확보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정규 노동자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는 개인이 노동 급여를 수령하는 지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전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의 신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자신 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있음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2018년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업 및 배달업 종사자가 노동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잦은 법적 분쟁을 벌였다. EU의 이번 결정은 유럽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초안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나 나온 결실이다. 초안에서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신청만 하면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간단한 조

건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자영업자인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의 사용과 최저임금의 수령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가지 지표 중 최소한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노동에 따른 보수가 사용자와 기업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이다. 둘째, 기업이 전자 수단을 통해 업무성과를 감독하는 경우이다. 셋째, 사용자가 업무 배정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넷째, 노동자가 자신의 고객 리스트를 구축하는 일을 제한받는 경우이다. 다섯째, 노동자가 자유롭게 업무를 구성하는 능력을 제한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상당수에서 관찰되는데,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의 2,800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 중 550만 명이 이러한 5개 지표 중 최소 2개 이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1) Le Monde, “Une directive européenne ouvre la porte à la requalification massive des travailleurs des plates-formes comme Uber ou Deliveroo”, 2023.12.14.

프랑스 :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 2024 파리 올림픽 기간 중 노동조건 개선 요구¹⁾

2023년 12월 14일, 프랑스 차량 호출 서비스업 대표단체인 전국차량호출협회가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업계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날 최대 2천 명의 운전자가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파리 동부 외곽도로에서 행진을 시작해 남부 외곽도로까지 7km의 거리를 이동했으며 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지역에는 올림픽 우선 차선이 운영되고,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는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총 185km에 달하는 이 차선은 택시, 버스 등 올림픽 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 차량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차량호출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 기간 동안 약 6만 명 이상의 신규 파트타임 운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고, 교통부가 차량 호출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나 통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를 낸 점을 비판했다.

2024년 1월 11일에는 프랑스 차량 호출 서비스 협회, 노동총연맹, 차량 호출 서비스 노동조합이 올림픽 기간 내 차선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결집하여, 일반 택시와 비교해 차량 호출 서비스 및 플랫폼 서비스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규탄 시위를 열었다.

1) Le Monde, “Paris 2024 : les conducteurs de VTC se mobilisent pour dénoncer leurs conditions de travail durant les Jeux olympiques”, 2023.12.14.

프랑스 : 마크롱 대통령,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시사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4년 1월 16일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에 대해 성과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 이는 향후 진행될 공공부문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프랑스 공공부문 인력은 약 5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기본급은 지수 봉급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체계는 직위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정해진 지수를 고려해 개별 공무원의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정부와 병원, 지방정부 등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급과 근속연수가 같으면 받는 기본급도 동일하다.

여기에 일종의 보상금과 수당이 주어지는 보상체계가 더해진다. 초과 근무나 지리적 이동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개인의 성과나 생산성을



반영해서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공무원의 개별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가장 주요한 성과금은 연간 보상 보충금인데, 공무원의 직업적 헌신과 서비스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공무원 임금에서 이 같은 보상금과 성과금이 차지하는 총비중은 약 2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새롭게 총리에 지명된 가브리엘 아탈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를 향해 공무원 임금체제와 관련해서 근속연수와 함께 성과를 “승진과 임금의 주요 기준으로

오늘날보다 더 많이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몇 주 안에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애초 계획으로는 2024년 2월 스타니스라스 게라니 전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부문 개혁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법안에는 예컨대 전기 또는 가스 사용량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한 경우 해당 조직에 성과금이 지급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대해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혁은 임의적인 임금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이 제기됐다.

1) Franceinfo, “Rémunération au mérite : trois questions sur la réforme pour les fonctionnaires voulue par Emmanuel Macron”, 2024.1.17.

스페인 : 2023년 3분기 노동비용지수 증가

2023년 12월 11일, 스페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3분기 조화노동비용지수(ICLA)¹⁾ 보고에 따르면 스페인의 조화노동비용지수는 0.9% 증가했다. 즉 고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노동비용지수가 1분기 1.8% 증가, 2분기 1.5% 증가했던 것에 비해 3분기 증가폭이 적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이 발표는 전년동기대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문도 보여주는데, 연간 인건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부동산(13.0%), 정보통신

(8.2%), 예술 및 오락활동(7.8%) 순이었다. 반면 광업 및 채굴(0.3%), 에너지(1.8%), 금융 및 보험(3.0%) 부문은 증가율이 낮았다. 임금비용의 경우 부동산업이 14.1%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상승세를 주도했고 정보통신(8.3%)이 그 뒤를 이었다. 3분기에 인건비가 줄어든 산업은 광업 및 채굴업으로 3.1% 감소했다. 한편 최근 다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사이 임금은 4.14% 상승했다. 이는 경영자단체와 주요 노총이 2023년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제시한 수치와 비슷하다.³⁾

1) ICLA는 모든 EU 회원국의 노동비용에 대해 공통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시기 적절한 측정 기준으로 노

동비용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기별 노동비용지수이다.

- 2) INE(2023), “Índice de coste laboral armonizado. ICLA. Tercer trimestre 2023”, <https://www.ine.es/> (2023.12.13).
- 3) El País, “El coste por hora trabajada crece un 5,4% anual en el tercer trimestre y suma ya nueve meses al alza”, 2023.12.11.

스페인 : OECD, 스페인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에 경고

OECD는 2023년 12월 13일 『한 눈에 보는 OECD 연금 2023』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 연금제도 개혁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금재평가로 인한 새로운 수입이 연금지출의 증가를 부분적으로만 충당한다고 경고했다.¹⁾ 또한 고소득자의 연금기여금 인상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체 계산을 통해 결국 2050년에 GDP의 1.1%에 달하는 기금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²⁾

덧붙여 OECD는 스페인에서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예산 또는 적자를 예측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지적하고, 2024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할 연구 결과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OECD 보고서의 저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각 국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고, 연금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현재 GDP의 12.3%를 차지하는 스페인의 연금지출은 이미 OECD 평균(8.9%)과 EU 평균(8.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14.8%)와 이탈리아(15.4%)는 GDP 대비 연금지출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³⁾

- 1) OECD(2023),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https://www.oecd-ilibrary.org/> (2023.12.18).
- 2) El Mundo, “Los gastos crecen el doble que los ingresos: la OCDE alerta sobre la reforma de las pensiones en España”, 2023.11.13.
- 3) RTVE, “La OCDE avisa de que la reforma de las pensiones en España solo cubre una parte del gasto extra”, 2023.12.13.



스페인 : 최저 실업률로 2023년 마무리

세계경제 둔화 가운데 스페인 고용시장은 낮은 실업률로 2023년을 마무리했다. 실업자는 2023년 12월 270만 명으로 2022년보다 13만 명 줄어들어서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와 관련된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인해 고용관련 지수는 꾸준히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지만, 전년에 비해 실업률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 2024년에 실업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¹⁾

일자리는 2023년에 53만 9,740개가 창출되었으며, 대부분의 일자리는 여성이 채웠다. 동시에 실업자 수는 13만 197명 감소했다. 스페인 노동

개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무기계약직 비율은 8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임시직 비율은 14%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부문이 전체 고용을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의 89%를 차지했다. 서비스 부문 노동자는 1,600만 명에 달한다. 제조업 노동자는 전년대비 4만 3,058명 증가한 240만 명에 육박했으며 건설업 노동자는 최근 몇 달간 급리 인상으로 주택 매매가 감소했음에도 전년대비 3만 1,147명이 증가한 140만 명에 달했다. 반면 농업은 1만 8,248명 감소하여 100만여 명에 머물렀다.²⁾

- 1) El País, “España crea más de medio millón de empleos en 2023 a pesar de la inflación y las tensiones geopolíticas”, 2024.1.3.
- 2) RTVE, “El mercado laboral cierra 2023 con cifras récord: más de 20,8 millones de afiliados y el paro más bajo desde 2007”, 2024.1.3.

일본 : 스타벅스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2023년 11월 29일, 일본 스타벅스커피재팬 노동자들이 결성한 스타벅스유니온재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에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 노조는 2023년 11월 1일, 스타벅스커피재팬의 노동자 3명이 모여 결성되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수도권청년유니온을 통해 회사와 임금 협상을 시도했으나 모든 요구가 거부되자

직접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¹⁾

노조에 따르면, 도쿄 내 한 매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시급은 도쿄도 최저 시급인 1,113엔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170엔이며, 한 장애인 조합원의 월급은 약 16만 엔이라고 한다. 이 두 조합원 모두 낮은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유학을 위해 퇴사하려는 조합원은 귀국 후 재취업

을 원하고 있는데, 유학 후 복직 시의 임금이 신입 직원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²⁾

노조는 임금인상, 유학 후 복직 제도 마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액세서리 착용 허용, 계산대 직원 의자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

스커피재팬 측은 노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노조 결성 움직임은 2021년 12월 미국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 개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³⁾

- 1) 毎日新聞, 「スターバックス:従業員ら3人でスタバ初の労組 賃上げなど要求」, 2023.11.30.
- 2) 毎日新聞, 「スターバックス労組結成、参加呼び掛け「賃金低く生活厳しい」」, 2023.11.29.
- 3) 日本経済新聞, 「日本のスターバックスで労組結成、賃上げなど要求」, 2023.11.30.

일본 : 석면 피해 노동자의 피해보상 요구 집회

2022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로 1,14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매년 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석면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인정받은 피해자 수는 총 2만 643명에 이른다.¹⁾

내구성과 단열 목적으로 사용되던 석면은 폐암이나 중피종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광물이어서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석면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202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진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취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위험성 경고를 표시하지 않은 건축재료 제조업체의 책임

을 처음으로 인정했다.²⁾

일본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설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기금을 통해 약 5,700명의 피해자에게 약 685억 엔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 측은 기금에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이 확정된 노동자에게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³⁾

2023년 12월 6일 일본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피해자와 유가족 및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건축재료 제조업체가 기금에 기여하기를 요구하고 기금 기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건축재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도 계속되고 있다.⁴⁾

- 1) 朝日新聞, 「アスベスト労災認定、昨年度は1140人 今後も同水準続く見込み」, 2023.12.13.
- 2) 毎日新聞, 「石綿労災、1215事業所で 厚労省、昨年度1140人認定」, 2023.12.14.



- 3) 朝日新聞, 「突然の息苦しさ、昨年末に発症「静かな時限爆弾」アスベスト被害」, 2023.12.13.
- 4) 朝日新聞, 「石綿賠償「企業も基金拠出を」メーカー、確定判決のみ補償」, 2023.12.14.

일본 : 아마존 플렉스 배송기사, 단체교섭 요구

“아마존 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배송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아마존 재팬과 개인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기반 위에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통적인 고용계약과 달리, 개인 사업자가 일회성 계약을 통해 “긱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배송 작업이 진행되도록 선택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¹⁾

하지만 최근 이 시스템의 작업량 및 보상 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부 배송기사들은 시스템 내 알고리즘에 의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으며, 갑작스러운 계정 정지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미야기 현의 20대 남성 배송기사를 포함한 여러 배송기사들이 “아마존 플렉스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아마존 재팬에 작업 방식과 보상 결정 알고리즘의 투명성 증진, 최저 보상금 인상, 산업재해 보험 적용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아마존 재팬 측은 배송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제출된 문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²⁾

일본 내 “아마존 플렉스” 배송기사들의 노조 결성은 배송량 증가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개인 사업자의 권리 보호 및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³⁾

- 1) 東京新聞, 「Amazon配達員「仕事量や報酬に透明性を」アマゾンフレックス巡り初の労働組合結成、交渉申し入れ」, 2024.1.16.
- 2) 朝日新聞, 「「評価・報酬のアルゴリズム開示を」アマゾンドライバーが団交要求」, 2024.1.16.
- 3) 日本経済新聞, 「Amazon運転手が労組 直接契約で初、報酬増など要求」, 2024.1.16.

일본 : 아킨도 스시로의 5분 미만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건

일본의 대형 회전초밥 체인점 아킨도 스시로가 5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

다. 도쿄의 한 지점에서 일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일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5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

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했다. 조사를 마친 중앙노동기준감독관은 아킨도 스시로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노동시간은 1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킨도 스시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수도권청년유니온을 통해 알려졌다.¹⁾

아킨도 스시로는 2022년 9월부터 노동시간을 1분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의 5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이타마 현과 센다이 시의 매장 노동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신고했으며, 각 지역 노동기준감독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²⁾

아킨도 스시로의 모회사인 FOOD & LIFE COMPANIES는 중앙노동기준감독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로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정규직 1,731명과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직원 4만 6,13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게 과거 5분 미만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³⁾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오바야시 테츠야 사무국장은 “삭감된 금액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과거분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⁴⁾

- 1) 毎日新聞, 「スシローに中央労基署が是正勧告 労働時間5分未満を切り捨て未払い」, 2024.1.11.
- 2) 日本経済新聞, 「スシローに労基署が是正勧告 5分未満の賃金未払いで」, 2024.1.11.
- 3) 時事通信, 「スシロー運営会社に是正勧告 5分未満の賃金未払いで—労基署」, 2024.1.11.
- 4) 朝日新聞, 「スシローに労基署が是正勧告 労働時間5分未満切り捨てで」, 2024.1.11.